

---

# 업 무 보 고

---

2018. 2. 27

금 융 위 원 회

## I. 2018년 업무추진방향

1. 기본방향 .....	1
2.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.....	3

## 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추진전략① 금융부문 쇄신 ➡ 금융신뢰 회복 및 공정경제 구축

① 금융당국 혁신 .....	5
② 금융산업 쇄신 .....	5
③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.....	7

### 추진전략② 생산적 금융 ➡ 혁신성장 적극 지원

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.....	9
②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.....	11
③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.....	12

### 추진전략③ 포용적 금융 ➡ 소득주도성장 지원

①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.....	14
②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.....	15
③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.....	16
④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.....	18
⑤ 국민 자산형성 지원 .....	21
⑥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 .....	23

### 추진전략④ 금융산업 경쟁 촉진 ➡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

①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.....	25
② 핀테크 활성화 .....	25
③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.....	27

### 추진기반 :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

① 금융안정 유지 .....	31
②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.....	33
③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.....	35

첨부 1 : 한국GM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.....	3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첨부 2 :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 .....	39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I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### 1

### 기본방향

- 금융안정과 엄정한 시장질서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「금융혁신」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‘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’ 구현을 적극 지원
  - **(금융부문 쇄신)** 금융당국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쇄신을 유도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‘공정경제’ 구현에 기여
  - **(생산적 금융)** 혁신기업의 창업·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‘혁신성장’을 견인
  - **(포용적 금융)** 서민·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‘소득주도성장’을 적극 뒷받침
  - **(금융산업 경쟁 촉진)** 혁신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을 제고
  - **(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)**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교란요인에 엄정 대응

➡ ‘4대 추진전략 및 3대 추진기반’에 따라 ‘18개 핵심과제’를 신속히 이행하여 「금융혁신」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

#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

## 4 대 전략

### 1 금융부문 쇄신 → 금융신평 회복 및 공정경제 구축

- 금융당국 혁신
- 금융산업 쇄신
-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

### 2 생산적 금융 → 혁신성장 적극 지원

-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
-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
-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### 3 포용적 금융 → 소득주도성장 지원

-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
-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-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
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국민 자산형성 지원
-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

### 4 금융산업 경쟁 촉진 →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

-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
- 핀테크 활성화
-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

## 추진 기반

### 1 금융안정 유지

- 리스크요인 점검 · 대응 강화
- 가계부채 관리 강화
-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

### 2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

-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
-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

### 3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

- 가상통화 대응
- 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

「금융혁신」의 일관된 추진

‘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’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,  
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겠습니다.

## □ 금융소비자 :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

- **(금융비용 절감)** 법정 최고금리 인하, 금융수수료 인하 등으로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이 상당 수준 절감
  - ※ 법정 최고금리 인하 :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.1조원 경감 (인당 약 38만원)
  - ※ 연체가산금리 인하 : 연간 5.3조원의 연체이자 경감 효과
- **(금융접근성 제고)** 민간금융과 복지지원 사이에서 소외받고 있는 서민들도 낮은 금리로 생계자금을 이용 가능
  - ※ 정책서민금융 공급 :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간 7조원 공급, 약 55만명 혜택(인당 약 1,300만원)
  - ※ 사잇돌 대출 확대 : 약 30만명의 연간 이자비용 약 1,000억원 절감(인당 약 33만원 절감)
- **(소비자선택권 확대)** 핀테크·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
  - ※ 빅데이터 : 개인의 성향·소비행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→ 중금리 대출, 보험료 할인, 맞춤형 카드혜택, 소상공인 지원(지역별 상권분석) 등이 가능
-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축소
  - ※ 특화금융사 출현으로 그간 수요는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서비스 출시
- **(소비자 보호 강화)**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체계 마련, 불법 사금융 근절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

## □ 기업 : 혁신창업·중소기업이 필요 자금을 원활히 조달

- **(혁신창업 생태계 조성)** 혁신모험펀드, 창업·보육시스템 조성 등을 통해 중소·벤처 기업의 창업이 보다 용이
  - ※ 혁신모험펀드 : ('18년) 2.6조원 → ('18년~'20년)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, 약 2,500개 기업 혜택(기업당 약 40억원)
- 연대보증 폐지로 혁신기업의 '두려움 없는 창업·재도전' 가능

- **(기업 자금애로 해소)** 혁신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
  - ※ 초대형 IB : 기업금융 의무비율(50% 이상) 도입 → 5개사 기준, 최대 24조원 지원
  -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과거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·동산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
  - ※ 정책금융기관 중기 지원 : 연간 122.1조원 공급, 약 42만개 중소기업 혜택 (기업당 약 3억원)
  - ※ 기술금융 공급계획(평가액 기준) : ('17년) 80조원 → ('18년) 105조원 → ('19년) 130조원(약 45만건 지원)
  - ※ 동산담보 활성화 : 부동산담보가 없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기계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원활한 자금 조달 가능

## □ 경제 전체 : 「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」 구현을 뒷받침

- **(가계소득 증대)** 가계 금융비용 절감·재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적극 지원
  - ※ ISA 세제혜택 확대 : 비과세한도 확대(250만원→400만원), 중도인출 허용
- **(혁신성장)** 가계대출·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유동성을 벤처·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여 경제 혁신동력을 강화
- **(일자리창출)** 핀테크 등 다수의 특화 금융사업자 출현,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경제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
  - ※ 핀테크활성화 : 핀테크 기업수를 현재의 2배로 증대('17.11월 208개 → '22년 400개)
  - ※ 혁신모험펀드 : 펀드조성 후 중장기적으로 약 2만명 고용창출 효과 예상
- **(공정경제)** 금융부문 채신과 함께, 대기업·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

## II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1

### 주요정책

#### 추진전략①

#### 금융부문 쇄신 ➡ 금융신뢰 회복 및 공정경제 구축

##### ① 금융당국 혁신

- (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)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

-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관리·이행

- \* 금융위 안전·의사록 공개,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권고사항(73개)을 최대한 수용하여 조속히 이행

- \*\* 혁신위 권고내용중 당장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방안을 검토·마련

- (직원행동강령 마련) 금융행정의 투명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·접촉 등에 대한 직원행동강령 마련('18.3월)

- 타 부처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당국 특성\*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

- \* 금융부문은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(금융행정혁신위 최종권고안, '17.12월)

##### ② 금융산업 쇄신

- (금융권 채용실태 점검·개편)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
- (금융공공기관) 채용실태 관련 자체점검 및 전면 점검 실시('17.10~11월)

- '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' 설치·운영('17.11월~)

○ (민간금융기관) **소 금융권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**(‘17.10~11월)

- 은행권 채용실태 자체점검(금감원, ‘18.1월) 결과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는 채용비리 등에 대하여는 기관장·감사 해임건의 등 엄중 처벌
- 검사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**모범규준\*** (Best Practice) 마련(은행연합회)

\* 예 : 평가수정 여지 등 차단(태블릿 PC 활용 등), 채용시스템 주기적 점검 등

- 소금융권 채용비리 신고를 위한 **내부고발센터**를 운영(‘18.2월~, 금감원) 하고, 2금융권 주요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채용실태 점검

□ (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)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보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 회복

○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(‘18.3월 방안 발표, ‘18.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)

<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 >

- CEO 후보군 관리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를 통한 평가 절차 마련
-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제한
-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, 외부전문가,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여 독립성 강화
- CEO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강화,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도 추진

○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체계 확립 유도(‘18.3월 방안 발표, ‘18.4분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)

-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공시를 강화하고,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주기적으로 상정하여 평가받도록 개선



### 3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

- **(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)**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하기 위해 ‘금융그룹 통합감독’ 제도 도입('18.2월 방안 발표)

※ ‘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’ 발표('18.2월) → 시스템 구축 및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영('18년중) → ‘금융그룹 통합감독법(가칭)’ 제정 추진('18.下)

- 감독체계·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,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·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\*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

\* 감독대상(안) :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(금융지주·동종금융 그룹은 제외)

-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금융 ↔ 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, 부실전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본건전성 제고\*

\* 계열사간 출자·거래관계, 그룹 지배구조 등에 따른 부실전이 위험을 점검·평가하고,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

- **(기업지배구조 선진화)** 기관투자자·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고, 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 실효성 제고

-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, 인센티브 제공, 연기금의 선도적 역할 유도 등 지원 강화

#### <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주요 과제 (예시) >

- 민·관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 →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수시 제공
- 연기금·정책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위탁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우대, 일정 요건 충족시 투자대상 회사의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등
-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연기금의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, 투자일임시 의결권 위탁 허용 검토, 기관투자자 공동행동 활성화 등

- **새도우보팅 폐지, 주주총회 활성화**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
- **감사위원회 운영, 위험 관리** 등 핵심적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**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및 모범사례** 제공 확대

\* 기관 설립 등 제도 도입여부 확인에 치중하는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 극복

- **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**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**의무화** (거래소 규정 개정, '18.3분기)

□ **(회계투명성 제고)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개혁과제의 합리적 제도 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신뢰도 제고**

\* '17.10.31일,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→ '18.11.1일 시행

**< 회계개혁 과제 주요 내용 >**

- (기업)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, 내부 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실효성 확보, CEO·CFO 등에 대한 회계교육(윤리, 실무 등) 체계 마련 등
- (회계법인)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,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,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
- (감독기관)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 선진화\*, 감리에 계좌 추적권 도입,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성실도 반영(국세청) 등

\*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→ 회계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,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

-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**아파트 관리비·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도** 함께 추진

\* 예: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징계·공시 강화, 비영리법인 외부감사실무지침 제정 등

## 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

- (혁신기업 「창업」 촉진) 민간의 창업기업 투자역량을 강화하고, 창업기업에 대한 융복합 금융지원도 확대
  -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등 창업기업 투자기구의 투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예비창업·분사형 창업기업 보증, 보증연계 투자 등을 확대하여 창업단계 혁신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
- (역동적 「성장」 생태계 구축)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(18.1.17일 방안 발표)를 통해 성장단계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, Scale-up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
  - 3년간 8조원\* 규모의 펀드를 조성·운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·M&A·회수를 지원하고, 20조원의 보증·대출 프로그램과 연계
    - \*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(2조원)는 모태펀드에서 조성
  - 다양한 인센티브\*를 확대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,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운용체계\*\* 구축
    - \* 예 : 초과수익 이전, 지분매입 옵션, 후순위 출자 등
    - \*\* 민간주도 출자사업 도입, 펀드운영위원회 및 운용사 선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 포함
  - 혁신·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M&A, 사업재편, 기술거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   - 특히, 혁신기업의 M&A·buy R&D·분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(관계부처 협업과제)

□ **(코스닥\*을 통한 「도약」 기반 강화)**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역동성과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하여 혁신 벤처기업의 Scale-up을 지원

\* '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' 발표 ('18.1.11일)

- 코스닥·코스피시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·혁신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\*

\* 코스닥시장 진입·퇴출 권한 등을 민간위원 중심의 코스닥위원회로 이관

- 코스닥 상장기업 및 코스닥 투자자에 대한 세제·금융지원을 강화\*하여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

\*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%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「코스닥 벤처펀드」 활성화(기재부 협업), 코스닥 Scale-up 펀드(3,000억원) 조성

-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

\* 세전이익·시가총액·자기자본 중 1개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 다변화

□ **(실패기업 「재기」 지원 강화)**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폐지('18.3월)하고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재기·재창업 지원 확대

- (연대보증 폐지) 법인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, 보증부대출의 시중은행 부담분(15% 내외)까지 확대 유도

\* ('17.8월)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연대보증 면제 → ('18.3월) 7년 이후 기업도 면제

- 신규자금 공급 위축 우려 완화, 부실률 관리 등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도 마련

- (재기·재창업 지원)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부정적 신용정보의 공유·활용을 제한\*하고 재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\*\*

\* 신·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간 불이익정보의 공유를 제한

\*\* 재기 의지,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기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공

## 2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

### □ (금융업 자본규제\* 개편) 시중자금이 가계부채·부동산이 아닌 혁신·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 개편

\* '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' 발표 ('18.1.19일)

- 은행 예대율 개선\*,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규제부담 상향 등 가계 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

\* 대출금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(+15%),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(△15%)

-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 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(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\*) 도입

\* 예 : 가계부채 증가속도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'추가 자본 적립 비율'을 결정 →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자본(보통주) 적립

-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, 자산건전성 분류,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\*

\*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합리화, 중기 특화 증권사의 중소·벤처기업 투·융자시 자본규제(NCR) 부담 대폭 완화 등

### □ (기술금융 활성화)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개편('18.6월 방안 발표)

- 기업의 미래가치·성장성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모형을 정교화하고 평가품질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\*

\* 지적재산권 평가를 내실화(특허권 수→특허권 가치), 매출·영업전망 평가 강화, 기술금융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전문인력 교육 강화

- 신용평가와 기술평가의 통합을 추진하여 기술력이 신용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\*

\* ('18년)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 마련 → ('19년) 은행별 통합여신모형 개발 → ('20.上) 여신모형 승인 추진(바젤규정에 따라 최소 '19.6월 이후 여신모형 승인 가능)

□ **(동산담보 활성화)** 동산이 중소기업의 담보자산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('18.3월 방안 발표)

○ 동산담보 이용가능 기업 및 담보물 범위를 확대하고, 일반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동산담보 대상 대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
\* 이용가능 기업(제조업→여타업종 확대), 담보물 범위(원재료→완제품 확대), 동산담보 취득 가능 대출상품(동산담보 대출 → 시설자금, 구매자금 확대)

○ 은행이 동산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'평가-사후관리-매각' 관련 인프라 조성\*

\* 외부기관에 의한 동산평가 심층정보 제공, IoT 사후관리 기반 마련, 금융권 동산담보 물량의 전문시장 매각 집중 및 기업 구매자금 지원 등

□ **(정책금융 역할 강화)** 중소(중견)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,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('18.4분기)

○ 중소\*·중견기업\*\*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6.2조원 확대

\* 산은·기은·수은·신보(계획, 조원): ('17년) 117.5 → ('18년) 122.1 → ('21년) 130.0

\*\* 산은·기은·수은(계획, 조원): ('17년) 38.5 → ('18년) 40.1 → ('21년) 45.0

○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대기업·전통산업 중심 지원에서 혁신·벤처기업·신산업 중심 지원으로 전환

\* (산은) 혁신성장 선도 금융기관, (기은)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, (신보) 시장형 보증기관

---

###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---

□ **(중소조선사) RG 발급지원 프로그램** 및 지원체계(금융어로 대응반)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중소 조선사의 애로에 적극 대응

○ 정책금융기관(산·기은, 신보)의 RG 발급지원 프로그램\*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('18년, 250억원)

\*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산·기은이 RG 발급시 신보에서 보증 제공

□ **(조선업 협력업체) 정책금융기관 현장 대응반\***을 통해 조선사 및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

\* 부산·울산·거제·창원·목포에 설치, 각각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 2인 파견

-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안내하고,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애로 해소방안 검토

□ **(지방 중소기업 지원)** 지역 조달자금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「지역재투자 평가제도」 도입('18.上 방안 발표)

- 예금수취기관(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)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·저소득자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

\* 정량·정성지표를 다양하게 평가하되,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실물경제 규모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지표 마련

- 평가결과는 해외사례\* 등을 감안하여 공시토록 하거나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

\* 美 지역재투자 제도(CRA) : 저축기관의 지역에 대한 대출·투자·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하고, 결과는 공시 및 감독당국 인·허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

□ **(크라우드펀딩 이용 지원)** 창업·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속적 규제완화 추진

-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·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\*('18.下)

\*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도박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허용

- 일정 금액·횟수 이상을 투자한 투자경험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확대\*('18.下)

\* 적격투자자 : 일반투자자 대비 투자한도가 2배 확대(연간 기업당 500만원, 누적 1,000만원 → 기업당 1,000만원, 누적 2,000만원)

-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진('18.下)

\* 예 :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금융상품 매매제한,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적용 배제

## ①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

- **(법정 최고금리 인하)** '18.2.8일부터 최고금리를 24%로 인하\*하여 저신용 취약계층(최대 293만명)의 이자 부담 경감(최대 1.1조원 경감 추정)

\* 대부업법 27.9% → 24%, 이자제한법 25% → 24%

- 금리 인하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저신용·저소득층에 대해 특례 대환상품('안전망 대출')을 3년간 총 1조원 공급

\* (대상) '18.2.7일까지 금리가 24%이상인 대출을 이용한 차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하였으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 / (금리) 12~24% / (한도) 최대 2천만원

- **(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)** 정책서민자금\*의 효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질적 개선 추진

\* 4대 정책서민상품(미소금융·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) 공급규모 : ('15년) 4.7조원, ('16년) 5.1조원, ('17년) 6.9조원 등 '08년 이후 총 34.1조원 공급

- 종합신용상담 강화, 제도권 금융이용 연계 강화\* 등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방식 개선 ('18.下)

\* 자금지원 前後 컨설팅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, 성실상환자 이자부담 지원 등

- **(중금리대출 활성화)**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('17년 3.5조원→'18년 4.2조원)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

-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(2.15→3.15조원, '18.上)

- 계열사 정보집적(빅데이터)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,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주요 금융그룹 등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

-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강화\*,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\*\*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

\* 중금리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에만 인센티브 부여(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산정시 우대) → 여전·신협으로도 확대(예: 대출자산 운용한도 적용시 우대)

\*\* 예 : 상품·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사전승인의무 면제 등



- **(연체방지 및 연체자보호)** 이자부담 증가 등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 지원\* 강화

\* ‘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’ 발표 (’18.1.18일)

-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, 원금상환 유예(주담대 : 3년, 신용대출 : 1년)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
- 연체가산금리 인하,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
- 담보권 실행 유예(최대 1년) 및 매매지원을 통해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

---

## ②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--

- **(신혼부부)**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‘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\*’ 출시(’18.3월)

\* 예)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(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)을 완화 적용 검토

- **(다자녀가구)**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‘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\*’ 출시(’18.3월)

\* 예) 대출한도(3억원), 주택가격(6억원), 우대금리(85m<sup>2</sup>이하)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 검토

- **(전세보증 이용자)**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\*하도록 제도 개선(’18.上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)

\*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(3억원)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이 제약 → 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 검토

- **(서민 취약차주)** 성실상환 중\*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 도입(’18.3월)

\* 예)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회복자,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서민금융 이용자 등

- **(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)**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·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\* 상품 도입('18.5월, 5,000억원 규모)

\* (요건)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이하 등

- **(고령층)**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\*을 마련('18.2분기)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적극 지원

\* 예) (현행)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지급 → (개선)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하여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(임대료) 확보 가능

---

### **3** **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**

---

- **(청년·대학생)** 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('18.上)하여 생활·주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, 군인 희망저축 등을 통해 재산형성 적극 지원

- 취업준비자금, 비주택(옥탑방·고시원 등) 주거자금 등 청년·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·대학생 소액금융 체계 개편\*

\* 지원대상·한도를 확대하고,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식 도입 검토

- 장학재단 대출을 연체한 청년·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\* 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개선하여 조속한 재기를 지원(교육부 협업)

\* (현행)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나, 장학재단은 예외 → (개선)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

- 향후 병사급여의 단계적 인상에 맞추어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편\*하고 금융상담·교육 내실화('18.3월, 국방부 등 협업)

\* 예 : 은행권 군인적금 月적립액 상향 등

- 병사들의 금융상품 가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홍보·안내방안\* 수립·추진

\* 예 : “복무 중 1학기 학자금 모으기” 등 명확한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

## □ (자영업자) 소상공인·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매 자영업자(소액결제업종)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추진('18.1월 방안 발표, 7월 시행)
  - 카드수수료 항목인 뱅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에는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
    - \* 소액결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편의점, 슈퍼, 제과점 등에 연간 약 200~300만원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-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('18.上)을 거쳐 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\* 마련('19.1월 시행)
  - \* 우대수수료를 인하 등 카드수수료를 조정, PG방식 영세·중소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, 영세·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(환급) 적용 등

## □ (노년층)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·개인연금 활성화 지속 추진

- 국민들의 자발적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 연금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
  - 세제혜택 확대\*, 수수료 구조 합리화,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\*\* 등을 통해 연금상품의 투자매력도 제고
    - \* 연금펀드·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('18년 세법 개정)
    - \*\* 대체투자 자산 및 해외주식 투자대상국 범위 확대, 저축은행 예·적금 편입 허용 등
  -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자산운용 유도\*
    - \* 목표수익률, 적립금 운용방식 등을 명시한 표준적립금운용계획서 마련·보급 등
  - 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('18.下)을 통해 '좋은 연금상품'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, 연금계좌간 이동을 활성화하여 경쟁과 혁신 유도

- **(장애인)** 장애인에 대한 금융이용 차별을 해소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
    -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,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등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('18.下)
    -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ATM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('18.下)
    -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 장애인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 대리발급 허용('18.上)
  - **(금융채무 연체자)**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정리 추진
    -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업권별 상시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소각을 유도('17년중 총 30조원·300만건 소각 완료)
    - 금융권,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\* 매입·소각을 위해 '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' 설립('18.2.26일 부터 신청 접수)
- \* 10년 이상 & 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자

---

#### 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---

- **(제도적 기반 구축)*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
    -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 마련, 금융상품자문업\* 도입 등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
      - \* 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, 판매와 자문업무간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원칙 규정
    -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
      -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\*을 체계화
- \*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행위금지, 광고규제

-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·금지할 수 있는 판매제한·금지명령권 도입
-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○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강화

-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고의·과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 전환
- 금융소비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금융회사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
-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□ (금융이용 부담 경감) 각종 수수료, 대출금리 부과체계의 합리성·적정성 등을 점검하고, 금융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

○ ATM 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를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\*하고, 투명성·공정성 제고방안 마련('18.3월)

\*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 결정체계의 합리성, 소득계층별 부담현황 등을 검토

○ 금리상승기에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\* 점검 강화(연중)

\* '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(은행연)'에 따라 은행 내부통제 절차 등을 거쳐 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는지 여부 등

○ '보험다모아'에 공시되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,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편('18.4분기)

□ (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) 신용대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신용등급의 정확성·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('18.1.30일 방안 발표)

○ '이용업권' 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

-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 (Thin filer)의 불이익을 해소
- 금융회사·CB사에 대해 본인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

□ **(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)** ‘문재인 케어’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

-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\*를 차질없이 시행(‘18.4월)하고, ‘문재인 케어’에 따른 손해를 하락효과를 분석하여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

\* 실손의료보험을 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에 특약 등으로 끼워파는 행위 금지

-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(‘18.4월), 단체-개인 실손 연계제도 마련(‘18.上)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

□ **(소비자 중심 금융혁신)**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 추진

- 금융위 옴부즈만을 ‘금융소비자’ 옴부즈만으로 개편\*(‘18.3월)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시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

\*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위촉

- ‘18년중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(1,200명 이상의 의견청취)을 실시하여 소비자중심 금융혁신 과제를 추가 발굴\*

\*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, OTP 재발급 관련 불편 개선,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등 10개의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중

□ **(채권추심 규제 정비)** 채권자(금융회사·추심업자)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 개선(‘18.上 방안 발표)

- 금융회사·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\*하고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

\* 부실채권 매각단계 마다 추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심의 강도도 높아지는 경향

-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정보 제공을 확대\*하고 사후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등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

\* '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'(신용정보원, '17.4월~)을 통해 일부 채무 정보를 제공중

-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\*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 추심회사,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 마련

\* 채권추심회사(신용정보법, 자본금 30억), 매입채권추심업자(대부업법, 자기자본 3억) 등

- **(보험 모집질서 개선)**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민원\*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모집질서를 개선(상시)

\* ('13년) 39,345건 → ('14년) 44,054건 → ('15년) 46,816건 → ('16년) 48,573건

- 홈쇼핑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·광고시 보험소비자 보호사항을 방송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('18.上)

-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\*하여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은 취약 대리점을 집중 감시

\* 소형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

---

## 5 국민 자산형성 지원

---

- **(ISA 혜택 강화)** ISA가 국민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본격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추진

- 서민과 농어민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일반형의 2배 수준으로 강화('18.1월)

\* (기존) 일반형·농어민 200만원, 서민형 250만원까지 비과세  
→ (개선) 서민형과 농어민은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

- 일반 서민이 결혼, 질병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SA의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('18.1월)

- ISA 도입 이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일몰('18년말) 연장을 추진하고, 예탁금 등 비과세 축소와 연계하여 가입대상 확대\* 검토('18.8월)

\* 현재, 근로·사업소득자만 가입 가능

- **(공모펀드 신뢰 제고)**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(수익률 제고, 비용 감축) 판매·운용 시장 구축(17.12월 방안 발표)
  - 판매사 신규 진입 허용(인터넷전문은행, 우정사업본부 등\*) 및 판매사·운용사의 펀드 유형별 수익률 공개 등을 통해 판매시장내 경쟁 촉진
    - \* 상대적으로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하여 판매시장의 ‘메기’ 역할 기대
  - 투자판단을 위한 핵심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(표준)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·활용하고, 펀드 유형별 명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\*
    - \* 예 : A클래스 → 장기투자형
  -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강화(연 50% → 25%), 추천펀드 선정절차 공정성 제고 등 ‘좋은 펀드’가 선택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국공채 분산투자 규제 완화,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(분기 → 반기) 등 과도한 규제비용 감축을 통해 펀드 관리비용 인하 유도
- **(숨은자산 찾아주기)**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등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(예금·보험 등) 조회서비스 지속 제공·개선
  - 소비자가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(약 7.4조원)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 시스템(17.12월 개시) 개선\*
    - \* 소비자가 확인한 숨은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
  - 인터넷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\* (“내 계좌 한눈에”)를 **금융권**으로 확대(은행·상호금융 → 우체국(18.上) 저축은행, 증권사(18.下)까지 확대)
    - \* 본인의 은행 계좌 잔액조회 → 50만원 이하,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수시 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이전(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)한 후 해지 가능
- **(투자자문·일임 제도 개선)**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투자자문·일임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 - ‘1인 투자자문회사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본금 등 투자자문·일임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\*
    - \* 금융투자업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(1인 자문 → 일임 → 사모자산운용)



-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로보어드바이저(Robo-Advisor)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\*('18.下)

\* 테스트베드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,  
①track record 축적(예: 2~3년) & ②최소자본금(40억원) 충족시 허용

-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 「투자일임 모범규준」 제정\*('18.下)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 환경 구축

\* 투자자 이익 최우선 의무, 중요사항 통지 의무, 기록보관 의무 등을 구체화

## **6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**

- **(사회적금융 활성화)** 정부·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('18년 2월 발표)

- 미소금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(연 50~80억원 규모로 확대) 및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('18년 400억원)를 확대
-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는 '사회투자펀드'를 조성·운영('18.上, 300억원)하고 크라우드펀딩\*을 통한 투자도 확대('18.2분기)

\* 유망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'마중물펀드' 조성,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업력제한 완화(現 7년 이내) 등

-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·융자시 중개기관 활용을 확대하고, 객관적인 사회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\* 마련을 추진

\* 우선 개별 기관별로 적합한 평가방법 마련·적용 후 이를 바탕으로 추후 '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' 마련을 추진

- 서민금융진흥원, 신보 등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연계·협력 및 투·융자 실적 공유 확대를 위한 '사회적금융협의회' 설치·운영

- **(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)**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

- 금융회사 자금공급의 일자리창출 기여도\* 및 자체적인 고용 수준\*\*에 대한 양적·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지표 개발

\* 예 : 일자리 창출 관련 자금공급 및 관련 상품개발 실적

\*\* 예 : 자체 신규 고용수·증감률,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

-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('18.上) 및 의견수렴('18.3분기) 등 추진

- 동 지표를 활용하여 경영공시, 금융의 날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

□ **(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)** 금융권의 자발적인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“사람중심의 금융” 실현

- **(보험권 사회공헌사업)** 금융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·건강·휠체어 등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

\* 소년·소녀가장 등에 대한 교육보험 지원, 고아원 소속 어린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지원,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등

- **(카드사 사회공헌사업)** 영세자영업자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지원 확대\*

\* 영세가맹점의 미소금융 운영·시설자금 이용시 금리 우대(연 4.5% → 4.0%),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중인 영세가맹점에 사업자보증금 저리 지원(총 20억원)

- **(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)** 은행권 등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상시화하여 서민금융 및 사회적기업 지원\* 등에 활용

\*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

## ①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

- (금융업 진입장벽 완화) 최소자본금 등 인가요건 완화, 적극적 인가 정책 운용 등을 통해 신규진입 촉진(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, '18.1분기)
  - (인가요건 완화) 영업형태·고객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전문 금융회사, 소규모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합리화
    - \* 상당기간 신규진입이 중단되었던 업종에 대한 신규진입 허용도 검토
  - (새로운 금융업 출현 촉진) 전 업권에 걸쳐 대상고객, 취급업무 등이 특화된 금융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    - \* 예 : 소매·온라인전문 금융회사 설립,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금융회사 설립 등
  - (인가절차 개선) 금융행정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및 인가절차의 신속성 제고방안 등 마련

## ② 핀테크 활성화

- (혁신적 금융서비스 확대) 新기술 - 금융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확대(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, '18.3월)
  -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 유도,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등 촉진
  -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본인정보 활용 여건 마련 검토
  - 본인인증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확대(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운영)

□ **(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)**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“사전 규제 → 사후규제(테스트 허용)”로 획기적 전환

-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, 개별 규제면제 등 규제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제정\* 추진

\*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되, 소비자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문은 엄격히 규율

-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제정 이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, 위탁 테스트,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시행\*

\*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(핀테크 기업 등)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('18년)

□ **(빅데이터 활성화)**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을 조성('18.3월,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종합방안)

- 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을 지원

- 빅데이터 분석·이용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데이터 처리·이용을 활성화

-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등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부문의 분석역량 강화도 지원

- 공공부문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·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고, 대·중소형사간 정보격차도 해소

-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정보를 활용한 표본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

-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실질화·합리화 및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

### 3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**(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)** 비조치의견서 활성화,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분야 혁신 지원
  -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을 개정하여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('18.2분기)
  -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을 개정하여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,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 행정지도 관리 체계화('18.3분기)
- **(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)** 금융당국간 외교관계 강화, ODA를 활용한 금융인프라 지원, 현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
  - 당국간 MOU 체결, 범부처 외교활동(예: 정상회담, 경제공동위)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
  - EDCF(유상원조)·KSP·KOICA(무상원조) 사업에 금융인프라 분야가 포함되도록 기재부·외교부·수원국과 사업필요성 등을 지속 협의
  - 해외금융협력협의회\*, 금융중심지지원센터(금감원) 등을 활용하여 현지정보 공유 및 애로해소 지원

\* 금융연구원(사무국)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설치·운영중(20개 공공·민간 금융기관 및 협회로 구성)

- **(은행업)** 핀테크, 비대면·모바일 플랫폼 확대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제고하고, 바젤규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준비
  - 은행과 ICT 기업간 협업 증가에 따라 은행의 부수·겸영업무 및 업무위탁 현황을 점검하고, 운용 탄력성 제고 등 개선방안 검토
  - 바젤Ⅲ 규제개혁 합의사항의 도입·이행('22년)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도모

\* 바젤규제 도입 TF를 구성·운영('18.1분기)하고, 국내 여건에 맞는 규제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발표('18.3분기)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충분히 수렴·반영

□ **(보험업)**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
보험의 **사회안전망**(Social Safety-Net) 기능을 한층 강화

○ **(건강증진형 보험)** 치료에서 예방(cure → care)으로의 사회적 관심  
변화에 맞춰 **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**(‘18.上)

- 「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」을 본격 시행하여 계약자가  
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**보험료 할인** 등을 받는 **혁신상품 개발 촉진**

○ **(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강화)** 대체부품 특별약관\*을 마련(‘18.1분기)  
하고, 사고발생시 **보험료 할증 사전안내 서비스\*\*** 도입(‘18.下)

\* 자기차량손해 사고 수리(쌍방과실사고, 대물사고 제외)에 부품가격이 저렴한  
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시, 부품가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

\*\* 자동차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시 차년도 보험료 예상 할증규모를 소비자가  
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회시스템 마련

○ **(건전성 감독 강화)** **보험회계기준(IFRS17) 개편**(‘21년)에 차질없이  
대비하고 **지급여력제도(RBC)의 국제적 정합성을 점진적으로 제고**

\* ICS, Solvency II 등 선진국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기반으로 충분한 테스트와  
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(K-ICS) 마련

□ **(금융투자업)** 혁신기업에 대한 **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**  
**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관련 자금중개기능을 강화**

○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**자금 운용현황, 기업  
자금 지원 효과**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,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추진(‘18.下)

\*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의 50%이상을 기업금융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

○ **투자중개업만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·건전성  
규제 등을 완화\***하여 모험자본 중개에 특화된 다양한 플레이어 육성

\* 인가제→등록제 전환, 최소자본금 하향조정, 중장기적으로 NCR규제 등 면제

- 금융투자업자가 중소·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NCR 위험값 산출시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\*을 면제('18.上)

\*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%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, 개별위험값 (4%~20%)의 일정 비율(50%~200%)을 추가로 가산

- PEF가 창업·벤처 투자, M&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간소화\*, 운용규제 개선\*\* 등 추진

\* 창투사의 창업·벤처 PEF 설립 허용, PEF 설립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

\*\* CB, BW 이외에 유사속성을 지닌 금융상품(전환우선주 등)에 대한 투자 허용

- 사모펀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(최소자본금 요건 20억원 → 10억원, '18.下)

- 중소·혁신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장 경쟁 촉진 방안 등을 검토\*

\*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활성화,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 여건 검토(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) 등

- (저축은행·상호금융업) 지역금융·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합리화 ('18.下 방안 발표)

-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 규제 개선(예 : 증자 요건(現 지점당 40~120억원) 완화) 등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강화 유도

- 상호금융의 부수업무 확대\* 및 신탁 감독기준 개편 연구를 통해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\* 다른 금융권에 허용된 공과금 수납·지급대행, 상품권 판매대행, 지자체 금고 대행 등 허용(신탁법 개정 추진)

□ **(신용정보산업)** 신용정보업(CB업)이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정보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('18.上)

- 산업특성에 맞게 법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진입규제를 완화\*하여 현재 과점상태인 신용정보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

\* 현재는 개인/기업 CB 구분없이 자본금 50억원 이상, 금융회사 50%이상 출자요구

- CB사에 빅데이터 분석·컨설팅 등 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허용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시장의 확대·발전을 선도\*

\* 미국, 영국, 호주 등 선진국은 CB사들이 보유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



## ① 금융안정 유지

- **(리스크요인 점검·대응 강화)**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,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
  - 기재부, 금감원, 한은 등 관계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
    - 시장 변동성 확대시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과감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도 철저하게 준비
  -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건전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·유동성 제고를 유도
- **(회사채시장 금리 변동성 완화)**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대비 강화
  - (P-CBO) 신보의 회사채유동화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('18년 2조원)
  - (회사채 인수지원) 산은 등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\*을 통해 최대 0.6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
    - \* 중소·중견기업의 중위험 회사채(BBB<sup>-</sup>~A<sup>+</sup>) 미매각분(최대 30%)을 산은에서 인수
  - (채권시장 안정펀드)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펀드(10조원+a)를 즉시 가동하는 등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
- **(가계부채 관리 강화)**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,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·체계적 관리 강화
  - \* ('16) 11.6% → ('17) 8%대<sup>e</sup> → ('18년 이후) 추세치 보다 0.5~1.0%p 낮은 수준 유도
  - 新DTI('18.1월), DSR('18.下) 도입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 취급을 억제

- 저축은행,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('18.下)으로 **全 금융권의 고정금리·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**

\* 은행, 보험,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既 도입

- 은행·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·분할상환 목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

\* (은행) 고정금리('17년 45% → '18년 47.5%), 분할상환('18년 55%)

\* (보험) 고정금리('17년 30% → '18년 35%), 분할상환('18년 50%)

-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(Covered Bond) **활성화 방안\*** 마련('18.上)

\* 예 : 적격대출 양수요건에 금융회사별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·커버드본드 취급 실적 반영, 커버드본드 발행절차 개선 등

- (가칭) 「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」 운영('18.3월~)을 통해 가계부채 관련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대응 강화

## □ (상시 구조조정) 구조조정 채권 매각 활성화, 기업구조혁신펀드, 기업재기지원 통합센터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추진 기반 확충

-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리 기준\* 및 행태를 개선하여 부실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조를 혁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\*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준 정비,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련 총당금·건전성 기준 검토, 은행의 KPI 등 인센티브 개선 등

- '시장 중심 구조조정'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\*('17.12월 방안 발표)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

\* 최초 1조원 규모로 조성('18.上)하고,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증액을 검토

-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(자본시장)·공급자(기업)가 집결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('18.3월)하고,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\*을 도입('18.上)

\* 회생기업 중 정상화 가능기업을 선별하여 채권결집·매각 및 DIP 금융 지원 (Debtor-In-Possession Financing) 등

- **(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)**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를 선진화('18.下)
  -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회생·정리계획(Recovery and Resolution Plan)을 미리 작성토록 하여 부실시 자체정상화 또는 정리절차를 신속히 추진
    - 대마불사(大馬不死)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금 투입 없는 정리를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(Bail-in)\* 제도 도입 방안 마련
  - \*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(FSB) 권고 및 G20 합의사항
  -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과도한 고금리 상품 등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제도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정리 추진
- **(공적자금 관리)** 공적자금 회수전략 및 상환계획을 재수립하여 공적자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
  - 공자위 논의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전략을 수립하고, 매각여건이 조성된 자산부터 신속히 매각하여 회수 극대화 추진(상시)
  - 공적자금 정기재계산\*을 실시하여 향후 10년간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채무의 완전상환 및 공정한 상환분담 추진(~'18.8월)
  - \* '02년 상환대책 수립후 상환부담 점검, 재정규모 산정 등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

---

## 2. **엄정한 시장질서 확립**

---

- **(불법사금융 엄정 대응)** 서민·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
  -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(총리실 주관, 금융위·금감원·행안부 등 참여)으로 일제단속 실시('18.2~4월)
  -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(벌금 5천만원 → 3억원) 및 배상책임 강화(최고금리 초과 이자 → 전체 이자) 추진(대부업법 개정 추진)

- **(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)**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역량 및 제재 강화
  -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'자본시장 조사단'의 위상 및 조사역량 강화 추진
  -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('17.12월 구축 완료)을 본격 가동하고,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('17.3월 도입)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과성 제고
  - 불공정거래 행위(미공개정보 이용, 시세조종)에 대한 과징금 신설 · 병과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(법무부 협조)
    - 손해배상 시효도 확대(안 날부터 1년, 있는 날부터 3년 → 각각 2년, 5년으로 확대)
- **(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)** 금융시스템이 범죄수익의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체계 정비
  -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및 금융권 전반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(NRA)하고, 고위험 분야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\* 마련
    - \* 관계부처 공동으로 범죄수익, 법·제도, 시장 감시체계 등 국가 전반의 위험평가 및 대응체계 수립('19.2월부터 실시되는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의 핵심 과제)
  - 방위사업비리 등 주요 범죄 관련 의심거래정보를 집중 분석하고, 가상통화 등 신종 자금세탁유형 관련 심사분석 강화
    -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진단 및 추진전략 마련
  - 금융회사(해외점포 포함)에 대해 위험평가시스템(RBA)을 활용한 상시 감독을 실시하고,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전제재를 확대
- **(금융 전산보안 강화)** 금융보안원·금융회사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악성코드 감염, 해킹 등 침해 대응역량을 강화
  - 금융보안원·금융회사간 침해정보\* 공유체계를 자동화하고, 이상 금융거래(금융사기)정보 시스템의 공유대상을 확대\*\*
    - \* 공격자 IP주소, 악성코드 유포지 정보 등
    - \*\* 현재 은행 · 증권 · 보험 · 신용카드사 등 70여개 → 저축은행 포함

□ **(금융지표 관리체계 마련)** 지표금리 등 금융지표(benchmark)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

\* 주요국은 LIBOR 조작사건('12.8월) 등을 계기로 'IOSCO(국제증권감독기구)의 금융지표 관리원칙' 등에 기반하여 "금융지표(benchmark)" 관리체계 강화 추진중

○ 코픽스 등의 산출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제출은행 및 지표 산출기관(은행연)의 내부통제 및 사전·사후 검증절차 강화

○ 금융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체계\* 마련('18.下)

\* 금융지표 산출 과정에서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, 산출절차 규정, 금융지표 산출 중단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 등

- 금융지표 산출과정에 대한 검사·제재 등의 공적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고의적인 금융지표 조작(manipulation) 가능성 등을 차단

○ 협회의 금융지표 산출은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별도 법인\*으로 산출업무를 이관·관리하는 방안 검토

\* 주요 금융지표 산출기관 분리 사례 : (EU) EBF(은행연) → EMM(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), (영국) BBA(은행연) → ICE(Intercontinental Exchange), (호주) AFMA(금융시장협회) → ASX(증권거래소), (일본) JBA(은행연) → JBA LIBOR Administration, (홍콩) HKAB(은행연) → TMA(Treasury Market Association)

---

③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

---

□ **(가상통화 대응)**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

○ 가상계좌 활용에 따른 불투명한 거래 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\*를 시행(1.30)

\*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제공하던 '가상계좌 서비스'를 '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'로 전환

- 금융회사의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(1.30. 시행)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,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**엄중 조치할 계획**

- 필요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**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하는 방안**을 검토\*

- \*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특금법 개정 검토

## □ (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) 핀테크,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신종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방지체계 구축

- 전자지급결제대행, 선불전자지급수단(상품권 등) 관련 **전자금융업자**에 대한 **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방안 마련**

- \*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용역 완료('17.9월)

- 가장(假裝) 법인 설립 등 **전문직종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**를 방지하기 위해 **비금융 특정직**(변호사·세무사·회계사 등)에 대한 **의무부과 추진**

- **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성**을 지속 점검

- \*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거래 변화 및 자금세탁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

## □ (P2P대출 법제화) P2P대출 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P2P대출 영업 및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 강화

- P2P대출 플랫폼 업체가 **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** P2P대출 관련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**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확보**

- P2P대출의 **부동산대출 쏠림을 완화하여** 개인·소상공인에 대한 **중금리 대출채널로 차별화**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강화

## 1 한국GM 경영상황

□ (경영상황) '1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지속중이며, 완전자본잠식 상태

(단위: 억원)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.3Q
매출액 (증감율)	159,497 (+5.9%)	156,039 (△2.2%)	129,182 (△17.2%)	119,372 (△7.6%)	122,342 (+2.5%)	83,464 (△5.8%)
영업이익	△3,403	10,865	△1,486	△5,944	△5,312	△4,366
(영업이익률)	(△2.1%)	(7.0%)	(△1.1%)	(△5.0%)	(△4.3%)	(△5.2%)
당기순이익	△1,081	1,010	△3,534	△9,868	△6,315	△5,270
부채비율	275.4%	354.5%	435.5%	1,062.6%	84,980.7%	자본잠식

\* '17년말 실적추정(회사제시) : 매출 10.7조원, 영업이익 △0.8조원, 당기순이익 △0.9조원

□ (부실화원인) GM의 글로벌전략 수정\*,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\* 중국/북미시장 위주로 사업재편, 중소형차 대신 대형SUV, 픽업 등 고수익 차종에 집중

○ '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감소가 직접적 원인

- 특히, 유럽수출 비중이 높은 군산공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

한국GM의 쉐보레 브랜드의 對유럽 수출(단위: 대)

구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
군산공장	38,876	65,673	54,956	27,455	1,722	129	46	-
전체	38,898	128,472	137,750	61,954	12,419	5,923	1,752	205

○ 일각에서는 높은 매출원가율\* 및 차입이자(4.8%~5.3%),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

\* 매출원가율(%,'16년): (현대)81.1, (기아)80.2, (르노)80.1, (쌍용)83.7, (한국GM)93.1

○ 산업은행은 소수주주(17%)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\*하였으나,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GM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

- \* ① 회사의 해외판매법인 철수에 반대입장 개진('13~'15년)  
 ② GM의 공장담보 제공 요구에 비토권 행사('15년~'16년)  
 ③ 자체적으로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지정 및 관리 강화('16년~)  
 ④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개선대책 수립 지속 촉구('16년~)  
 ⑤ 손실원인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주주감사 실시('17년)

## 2 그간 협의 경과

- 1월초 배리 앵글(Barry Engle) GMI\*사장은 기재부·산업부·금융위·산은 등의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한국GM 경영상황 및 발전전망을 설명

\* GMI(GM International) : GM의 아시아/태평양 지역 담당 본부(중국은 제외)

- 2월초 배리 앵글(Barry Engle) GMI사장은 산은과의 면담에서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원칙적 합의

- 관계부처 및 산은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으나,

- 2.13일 GM측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

\* 배리 앵글 GMI사장은 국회 설명(2.20일)에서 군산공장의 재가동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

- 2.22일 기재부, 산업부 및 산은 등은 GM측과 면담 실시

- 한국GM 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\*을 제시하고, GM측의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해줄 것을 요청

\*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

② 주주·채권자·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

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

- GM측은 3대 원칙에 대해 합리적(reasonable)이라고 평가하였으며, 신속히 정상화방안을 제출하고 재무실사\*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

\* 산은은 삼일회계법인(PWC)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, 현재 GM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

## 3 향후 대응방향

-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,

- 3대 원칙하에 GM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,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계획

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I. 금융행정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	
< I-1.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>	
I-1-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의 자세한 공개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『금융위 설치법』 개정('17.11.28.)에 맞춰 『금융위/증권위 운영규칙』 개정을 완료하고, 규정에 따라 상세 의사록 작성·공개 시행 중('18.1월~)</li> </ul>
I-1-② 금융 관련 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)과 감독규정(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시행세칙) 제·개정 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보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견 회신 개별통지 점검·관리를 강화하고 의견 회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 추진('18.1월~)</li> </ul>
I-1-③ 금융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항의 금융위원회 의결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『금융위 운영규칙』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중('18.1월~)</li> </ul>
< I-2. 검사·제재 행정 개선 >	
I-2-①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(실무 지침)을 마련하고, 금융회사에 요구한 사전검사자료 이력 검색 효율화를 위해 검사종합관리시스템 개선('18.上)</li> <li>검사부서 간 협업검사를 확대하고, 매년초 중점검사업무를 포함한 검사 업무 운영방향 발표('18.上)</li> </ul>
I-2-②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재심의위 제재 부의 예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열람 대상을 확대('18.上)</li> <li>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심제 실시('18.上)</li> </ul>
I-2-③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무부 유권해석 추진('18.上)</li> </ul>
< I-3. 행정지도 축소 방안 >	
I-3-①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(금융위원회 제정)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(금융감독원 제정)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, 행정 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개정 추진</li> </ul>
I-3-②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독행정업무에 대한 점검·관리를 강화하고 비공식 지시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진행</li> </ul>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< I -4.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>	
I -4-①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시효연장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	○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기촉법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국회와 협의해 결정('18.上)
I -4-② '산경장'을 통하여 구조조정 현안을 주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, 산업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·전략을 분석하는 방안 검토	○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경장을 적기 개최하여 구조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·결정하고, 사전 부실 예방, 선제적 산업, 혁신 등을 위한 산업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
I -4-③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	○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 조성운영('18.上)
< I -5.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>	
I -5-① 금융부문의 경우,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문제는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	○ 국내·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할 예정('18.1분기)
< I -6.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>	
I -6-① 국내 금융에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 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	○ 금융산업 진흥 측면과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측면이 보다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방안 검토
I -6-②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(2017.8월)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,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	○ 금융위원회 기능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추진 ○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
< I -7.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와 이견희 차명계좌 처리>	
I -7-①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함	○ 법제처는 '18.2.12일 '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,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'해야 한다는 회답을 통보 ○ 금융위는 '18.2.12일 과징금 징수 등 업무의 담당기관인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, 국세청·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후속조치 착수
I -7-②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·해지·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함	○ 금감원이 삼성특검 차명계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('17.11월)하고,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('18.1.13) * 현행 법령상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과 협력 예정
I -7-③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	○ 금융실명제 실시후 개설된 계좌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은 국회 등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Ⅱ. 인·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	
<Ⅱ-1.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추진방안>	
Ⅱ-1-① 케이뱅크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향후 발전방안 제시가 절실하며, 특히 앞으로 은산 분리 완화에 기댈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추진상황, 창의적·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,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전략 등 제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</li> </ul>
Ⅱ-1-②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,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인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인가절차 개선 방안*을 마련할 계획('18.1분기)</li> <li>* 주요내용 : 인가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, 인가기준 구체화 (인가매뉴얼 개편) 등</li> </ul>
Ⅱ-1-③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업권 별로 합리적 이유가 없이 다르게 규정된 인허가 관련법령을 통일성 있게 정비할 계획('18.1분기)</li> </ul>
Ⅱ-1-④ 은산분리 규제 관련하여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(5건)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, 금융위도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</li> </ul>
<Ⅱ-2. 초대형 투자은행(IB) 규제 개선>	
Ⅱ-2-① 투자은행의 고유기능(지분투자, M&A, IPO, Structured Financing, Prime Brokerage 등)과 연관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또는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·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이러한 방향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('17.12.1)</li> <li>- 법률 개정절차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는 한편, 개정 법률이 개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</li> </ul>
Ⅱ-2-②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강화를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대형IB 정책을 추진하면서 변화된 영업모델에 맞추어 건전성 규제를 이미 정비한 바 있음('17.5월)</li> <li>- 다만, 향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</li> <li>○ 투자자보호 규제의 경우 증권회사와 은행이 동일하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만큼, 양자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성은 제한적</li> </ul>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<Ⅱ-3. 인가 절차 개선>	
Ⅱ-3-①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매뉴얼 정비·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인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인가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('18.1분기)</li> <li>- 주요내용 : 인가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, 인가기준 구체화(인가매뉴얼 개편), 등</li> </ul>
Ⅱ-3-② 인허가 프로세스 상 외부기구 역할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	
Ⅱ-3-③ 인가 정책 발표 시 수탁고 요건 공개를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탁고 요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금감원 인허가 매뉴얼에 반영하고, 금투협을 통해 同 산정기준을 해당 업계에 별도 개별 안내('18.1.5. 관련 공문 既 시행)</li> </ul>
<Ⅱ-4. 금융업종별 진입/퇴출 정책 방향>	
Ⅱ-4-① 수익성, 경쟁정도,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업종별 진입정책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신규 진입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('18.1분기)</li> </ul>
Ⅱ-4-②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해관계자, 전문가,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리제도 개선안 마련 후 금산법 개정추진</li> </ul>
<Ⅱ-5.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화>	
Ⅱ-5-①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, 중개, 판매,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,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,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업무의 성격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('18.1분기)</li> </ul>
Ⅱ-5-② 금융소비자법 정부안에 따른 판매대리·중개업자, 자문업자 등의 경우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입을 대폭 완화.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편의 제고를 모두 고려하여,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유도하고, 대출모집인·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최대한 방지할 계획</li> </ul>
Ⅱ-5-③ 진입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금융관련법을 순차적으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련을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, 개별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('18.상반기 국회 제출)</li> </ul>
Ⅱ-5-④ 정책당국은 제도 자체의 네가티브화에 그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,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, 금융소비자 보호 등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네가티브화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하도록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진입 및 영업규제 운용과정에서 네가티브화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</li> </ul>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Ⅲ.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 방안	
<Ⅲ-1.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·공정성 확보 방안>	
Ⅲ-1-① 금융감독원의 채용 절차 전면적 개선을 통한 투명성·공정성 확보 필요	○ 최종 면접시 면접위원의 50%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한편, 채용공고시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 확인시 합격 취소됨을 사전에 명시('18.上)
Ⅲ-1-② 금융감독원 직원 인사 행정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	○ 채용시 최종면접 위원 50%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, 부정청탁 등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 핫라인 마련('18.上)
Ⅲ-1-③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 필요	○ 감독·검사, 시장, IT 등 전문분야를 설정하고, 개인별 전문분야 선택 실시 등('18.上)
Ⅲ-1-④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	○ 직원 정년제를 확실히 보장(계속)
Ⅲ-1-⑤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	○ 공공기관 점검결과를 토대로 “공공기관 관계부처 채용비리 근절대책” 발표(1.29일) → 후속조치 예정
<Ⅲ-2.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>	
Ⅲ-2-①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	○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절차 등을 개선 예정
Ⅲ-2-② 2017.8.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필요	○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한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개정에 맞추어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
<Ⅲ-3.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>	
Ⅲ-3-①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 제도의 개선	○ 금융지주회사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, CEO 선출시 금융관련 경력 등 자질 및 역량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 법령에 관련사항 반영('18.1분기중 입법 예고)
Ⅲ-3-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 풀(Pool)을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	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Ⅲ-3-③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추천이사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추진 과정에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참여</li> </ul>
Ⅲ-3-④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	
Ⅲ-3-⑤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, 인센티브 제공,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, 기업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</li> </ul>
<Ⅲ-4. 금융권 감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>	
Ⅲ-4-①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경영진의 영향으로 선임되는 '낙하산'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대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 개정안 마련('18.1분기중 입법예고)</li> </ul>
Ⅲ-4-② 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체 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담당 조직에 대한 인사 및 예산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동의권 보장 등 감사조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내규를 마련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 개정안 마련('18.1분기중 입법예고)</li> </ul>
IV.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	
<IV-1.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>	
IV-1-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흥원과 신복위간 이해상충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원스톱서민금융체계 구축 방안 마련('18.下)</li> </ul>
IV-1-② 국민행복기금 정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정리 추진('18년)</li> </ul>
IV-1-③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기연채채권정리를 위한 민간기구 설립('18.上)</li> </ul>
IV-1-④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 후 근본적 재설계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책서민금융 성과 및 한계 분석 후 정책 서민금융 체계 개편방안 마련('18.下)</li> </ul>
IV-1-⑤ 미소금융대출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	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<IV-2.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 지원>	
IV-2-①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 등을 권고함	○ 권고안 내용을 반영하여 「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·발표('18년 1분기)
<IV-3.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>	
IV-3-① 심층적인 자료분석 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협 감독기준 개편 검토	○ 관련 연구용역 추진('18.上) -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·신협과 함께 T/F 구성·운영 → 감독기준 및 중앙회 감독기능 강화 개편방안 마련('18.下)
IV-3-②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	
IV-3-③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	○ 중앙회가 조합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경영개선자금을 통해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- 장기간 부실조합으로 정상화가 곤란한 한계조합은 단계적 합병 유도 - 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은 자금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 도모
IV-3-④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대정신, 그리고 민주적 운영,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에 부합하는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	○ 새로운 중앙회장 선출(2.8) 이후 신협 중앙회가 관련 절차(이사회 및 총회)를 거쳐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안 인가를 신청할 경우 승인할 계획
IV-3-⑤ 외부로부터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고자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	○ 현재 국회에 관련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회부(민병두 의원 대표발의, '17.11.14)되어 향후 논의 예정 - 법안 심사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
IV-3-⑥ 정부로부터의 지원 근거 확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 요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	○ '18.1분기 중 예보료율 인하 검토 - 신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감액분의 일부를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 및 사회적금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
IV-3-⑦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강화 정책기조를 적극 시현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본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필요	○ 향후 관련 논의시 세제당국과 가입자격 제한, 한도금액 축소 등 합리적 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

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<IV-4.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>	
IV-4-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(2017.8.)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·독립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설치 근거가 국회 계류중인 금융위설치법에 반영되어 있으며,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</li> </ul>
IV-4-②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집단소송 도입, 입증책임전환 등이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입증책임전환)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국회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되어 있으며, 법안 제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</li> <li>○ (집단소송) 소비자 관련 영역 전반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TF*에 참여하고 있으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법무부를 중심으로 '집단소송제도 개선 위원회'를 운영하여, 집단소송 적용범위 등 제도개선을 논의 중</li> </ul> </li> <li>- 금융부문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도 전체적인 논의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갈 계획</li> </ul>
IV-4-③ 일정금액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을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쟁조정절차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</li> <li>-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소송중지제도*, 소액사건조정이탈금지제도**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소송중지제도)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(\$45)</li> <li>** (조정이탈금지제도)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(\$46)</li> </ul> </li> </ul>
IV-4-④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</li> </ul>
<IV-5.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>	
IV-5-① 원금 연체 시 채무변제 총당 순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 발표('18.1월) 및 관련 제도 개선('18.上)</li> </ul>
IV-5-② 가산금리 공시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권의 가산금리 공시 강화 유도</li> </ul>



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	금융위 이행 계획
<IV-6.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>	
IV-6-①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감원 민원관리시스템을 고도화('18년말)</li> <li>○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보험상품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공개방식을 개선('19년중)</li> <li>○ 보험사·GA의 불완전판매행위 적발시 최대한 신속·엄중히 제재(상시)</li> </ul>
IV-6-②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축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비, 위험수당 공제 관련 설명의무 이행 등 준수여부를 보험사의 중점 검사항목에 반영(금감원, 18.下)</li> </ul>
IV-6-③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T/F 운영중</li> <li>○ T/F 논의를 통해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('18.上)</li> </ul>
IV-6-④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중립성·실효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「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」를 신설·운영하고,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('18.上)</li> </ul>
<IV-7.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(KPI) 방식 개선>	
IV-7-①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KPI지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KPI지표 개편을 유도하도록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바람직한 KPI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논의내용 전파를 통해 은행권의 KPI 자체 개편 유도</li> </ul>
<IV-8.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>	
IV-8-① 은행/비은행 여부에 따른 신용등급평가 차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('18.1월중)</li> </ul>
<IV-9.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 점검>	
IV-9-①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,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키코 공대위로부터 피해기업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검토 중으로 필요시 관련 대응방안 마련</li> <li>○ 금융상품 판매금지명령제도가 반영된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국회 논의 지원</li> </ul>
IV-9-②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검사 및 제재규정」 개정을 통해 다수 금융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</li> </ul>

